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 선택

## 바른 정답

1	2	3	4	5
④	②	①	③	④
6	7	8	9	10
⑤	③	④	⑤	①
11	12	13	14	15
⑤	②	②	⑤	②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③	⑤

### 1. 실천 윤리학에 대한 메타 윤리학의 비판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규범 윤리학뿐 아니라 메타 윤리학도 규범적 명제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고! 심지어는 기술 윤리학도...

[정답] ④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 ‘어떤 사람’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 있다.

[선지 분석] ① 메타 윤리학의 주장이 아니다. 메타 윤리학에서는 규범적 명제를 탐구로 삼는다. 물론 메타 윤리학에서 규범적 명제를 확립하는 것을 탐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메타 윤리학에서는 규범 윤리학에서 확립해 놓은 여러 도덕 이론들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명제를 구성하는 도덕 언어들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한다.** 이것이 규범적 명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② 실천 윤리학에서 간과할 내용이 아니다. 실천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삶에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데 힘쓴다.

③ 메타 윤리학의 주장이 아니다. 여러 문화권의 도덕 관습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④ 메타 윤리학에서는 규범적 명제, 예를 들면 “살인은 옳지 않다.” 따위의 명제가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자체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메타 윤리학자들은 규범적 명제가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규범적 명제가 참 거짓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살인은 옳지 않다.”라는 규범적 명제는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이 규범적 명제는 의미는 사실상 “나는 살인이 싫다.”라는 감정 표현 문장이나 “살인을 하지 마!”라는 명령 문장의 의미와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두고 ‘비인지주의’라고 한다. 반면 규범적 명제가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결론내린 메타 윤리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반대로 인지주의에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곧 규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입장 차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비인지주의의 메타 윤리학자들은 규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데 반해, 인지주의의 메타 윤리학자들은 규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증하

고자 한다.”(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문항 ③)라는 설명에서 ‘윤리학’이 가리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규범 윤리학’인 것이다. 비인지주의의 메타 윤리학자들은 규범 윤리학을 이루는 규범적 명제들이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이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인지주의의 메타 윤리학자들은 규범 윤리학을 이루는 규범적 명제들이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을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범 윤리학이 논리적으로 인지주의의 토대에서 있다는 점이다.** 규범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규범 윤리학적 탐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1회 해설지의 1번 문항 해설에서 설명했던 내용, 메타 윤리학이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즉, **규범 윤리학은 규범적 진술이 객관적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범적 진술이 객관적으로 성립 가능한 것인지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적 명제 자체의 객관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 아니다. 실천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일종이므로, 실천 윤리학 역시 규범적 명제 자체의 객관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⑤ 실천 윤리학에서 간과할 내용이 아니다. 실천 윤리학에서는 현실의 여러 도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여러 학문들의 성과를 참고한다.

2. 홉스와 루소의 사회 계약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홉스가 상정한 전쟁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권’ 향유가 가능하다. 오히려 그것이 무제한적이어서 문제가 된다.

**[정답] ②**

**[제시문 분석]** 갑은 홉스, 을은 루소이다.

**[선지 분석] ①** 홉스에 따르면 대표자는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20번 문항의 선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② 갑: 대표자는 계약의 주체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다. (홉스 O)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20번 문항 -

②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연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각자 자연권을 향유하며 자기 보존을 위해 경쟁한다. 그러한 경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 홉스,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9번 문항 -

오히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무제한의 자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초래된다.

갑: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르는 무제한의 자연권을 행사함으로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초래한다.  
- 홉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19번 문항 -

홉스가 상정한 전쟁 상태로서의 자연상태는 뭔가가 좀 많이 비참해 보인다. 그런데 이 ‘비참함’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홉스가 상정한 전쟁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는 비참하고 혼란스러우므로, ‘자연권’처럼 고상한 무언가를 누구도 향유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이해이다. **홉스에 따르면 전쟁 상태의 비참함과 혼란은 인간이 자연권을 향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향유해서 발생한다(무제한의 자연권).** 그러므로 홉스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움으로써 사람들이 무제한적으로 누리던 자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해 관련한 개념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여기서부터는 ① 선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읽어 보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다음의 기출문제 선지를 한번 보자.

④ E: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홉스가 루소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음)  
-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0번 문항 -

이 선지가 출제되었을 당시 몇몇 강사들은 이 비판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가 홉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판이 홉스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해설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기출문제 제시문들에 기초하여 볼 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해설이다. **홉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르는 무제한의 자연권을 행사함으로써 전쟁 상태가 초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19번 문항 제시문)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홉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설령 자기의 복수와 몸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수행할 자유가 ‘자연권’으로서 정당화된다 해도 각자가 그것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권리로서 실제로 지켜지고 존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상태’란 각자가 무제한의 자연권을 지니는 상태,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상태, 즉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몸에 대해 서조차 그것을 자유롭게 해도 되는 권리를 서로가 지니는 상태이다. ... (중략) ...

그러나 한편으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각자가 무제한의 자연권을 지니는 것이 ‘전쟁상태’를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자연권 자체도 파괴되고 말므로 자연법은 평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권의 제한을 명령하게 된다. 그것이 ‘제2의 자연법’이다.  
- 최공웅·최진원, 「토머스 홉스의 생애와 사상」 -

당시 해설을 잘못한 강사들의 논리는 홉스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홉스가 상정한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무제한의 자연권’을 누리고, 그것이 결국 실질적인 권리의 보장을 해치는 전쟁 상태를 야기한다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해설이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의 경우 강사들의 설명이 학문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념과도 상충하는 경우까지 상당히 자주 있다. 잠시 이야기가 세서 하는 말인데, 나는 “본배적 정의는 중립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노직의 진술을 본배적 정의는 ‘실현해야 하니까’ 중립적 개념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까지 보았다(부끄러움이 이유인지 지금은 영상이 내려갔다). 노직의 사상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해조차 결여하고 있는 사람이 노직의 사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인 것이다. **본인이 선택한 강사의 강의에서 혹시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는 않은지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한다.** 오류를 내포한 설명은 당장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 수능윤리를 공부하는 데는 여러 개념들을 어떤 일정한 정합적 틀로 묶어 내는 작업이 꼭 필요한데, 오류를 내포한 설명이 이러한 작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선택한 강사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0번 문항의 ④ 선지를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가? 꼭 한번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

③ 루소는 국가가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이는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ㄱ. A: 국가가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가? (루소 O)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98p 5번 문항 -

④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는 사회 계약을 통해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함으로써 확립된다. 홉스나 로크와 달리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이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다고 보았다는 점에 주목하자.

루소가 주장한 사회 계약의 핵심은 일반 의지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루소는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면 공동체 전체의 의사인 일반 의지가 확립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사회 계약의 당사자는 개인들 전체인 것이다.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91p 자료 플러스 -

⑤ 홉스와 루소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된 것이 곧 국가라고 보았다.

갑: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 홉스,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3번 문항 -

우리는 사회 계약이 다음의 말로 환원됨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그 즉시 이 화합 행위는 각 계약자의 개별적인 인

격이 있던 자리에, 집회의 투표수와 동수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적 가상 단체를 생산하며, 이 단체는 이와 같은 화합 행위로부터 통일성, 공동의 자아, 그리고 생명과 의지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나머지 모든 인격의 결함을 통해 형성되는 이 공적 인격은 예전에 도시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정치체라는 이름을 가진다.

- 루소, 『사회계약론』 -

3. 칸트의 예술관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칸트의 예술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묻고 있다.

**[정답] ①**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칸트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는 예술적 판단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예술적 판단은 동시에 보편성을 띠 수 있는데, 이는 예술적 판단이 일체의 이해 관심을 배제한 자율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ㄴ. 칸트에 따르면 예술은 인간이 감성적 판단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ㄷ. 칸트는 예술을 감성적 판단력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6p 5번 문항 해설 -

ㄹ. 칸트는 예술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지 않았다.

ㄱ. A: 예술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하는가? (칸트 X)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147p 5번 문항 -

ㄷ. 칸트에 따르면 예술은 도덕에 종속되지 않는다. 칸트가 볼 때 미적 체험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하는 이유는 예술이 도덕에 종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미(美)와 선의 형식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죽음은 악도, 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정답] ③**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공리주의 사상이 벤담이다.

**[선지 분석]** ①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고통을 유발한다고 보지 않는다. 고통은 일종의 감각인데,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죽음은 감각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갑: 모든 좋고 나쁜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는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자는 사려 깊음을 통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

②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음 이후에 의식 작용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그러므로 인간이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깨달을 수는 없다.

③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④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죽음 이후에 인간은 소멸하므로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⑤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죽음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므로 회피하거나 열망할 이유가 없다.

5. 거짓말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살아.

이하의 내용은 생활과 윤리와는 직·간접적 관련이 없으나, 알아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라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있다. 문항의 <사례>에서 소형 공익 정부 기관으로부터 J가 퇴사한 이유가 정말 결직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알아보려면, J가 퇴사한 소형 공익 정부 기관에 다른 대형 공익 정부 기관에서의 결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한 사례가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참고로 모든 정부 기관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며,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역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다면, 해당 사립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ex.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 그런데 1회에 이어서 2회에서도 왜 자꾸 J냐고? 그건 내가 가수 이선희의 <J에게>라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J에게 할 말이 아주 많기도 하고.

**[정답] ④**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의무론 사상이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칸트는 거짓말이 그른 이유가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② 칸트는 거짓말이 그른 이유가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③ 기초적 양심조차 결여한 사람이 제시할 조언이다.

④ 칸트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소중한 가르침을 J가 꼭 명심하길 바란다.

⑤ 물론 J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J의 지식에게 알려진다면, J가 적잖은 망신을 당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칸트는 거짓말이 그른 이유가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6. 배아 복제에 대한 두 입장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서로 상반된 결론을 지지하는 두 입장이 어떤 점에서는 공통 주장을 가질 수 있다.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가)는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건강권 훼손을 이유로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입장, (나)는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과 배아 복제가 인간의 질병 치료에 유용하다는 점을 근거로 배아 복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선지 분석]** ㄱ. (가)는 배아가 생명권을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배아 복제가 여성의 건강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배아 복제가 도덕적으로 부당하고 본다.

ㄴ. (가)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과 배아 복제를 도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면서도 여성의 건강권 훼손을 이유로 배아 복제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ㄷ. (나)는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으므로 배아 복제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ㄹ. (가)는 배아 복제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인간인 여성의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점을 이유로 배아 복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배아 복제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인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한다면 배아 복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7. 정약용의 직업 윤리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정약용의 청렴 사상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을 묻고 있다.

[정답] ③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정약용이다.

[선지 분석] ① 정약용은 수령이 청렴으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당연한 소리이다.

② 정약용은 수령이 공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① 갑: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정약용 X)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문항 -

③ 정약용에 따르면 절용이 수령이 통치에서 행해야 할 유일한 실천 방안인 것은 아니다.

③ 공직자는 절용을 백성 통치의 유일한 실천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 (정약용 X)  
-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항 -

정약용은 절용뿐 아니라 청렴의 자세 또한 수령이 가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① 애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절용과 청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정약용 O)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8번 문항 -

제시문에서도 “그러므로 절용(節用)은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정약용의 입장에서 절용뿐 아니라 다른 임무도 수령에게 부여됨을 암시한다.

④ 정약용에 따르면 크게 탐하는[大貪] 자는 반드시 청렴해지려 한다. ‘아니, 크게 탐하는 놈은 뭔가 한 탕 해 먹으려고 부패를 저지르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이 드는 수험생이 있다면 관련하여 정약용의 논의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다음의 기출문제 제시문을 읽어 보자.

(전략) ... 청렴은 큰 장사[賈]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 (후략).  
- 정약용,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번 문항 -

정약용은 청렴이 큰 장사라고 말하였다. 이는 청렴한 공직자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쉽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포부가 큰 공직자는 스스로 청렴하고자 한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가 지혜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직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는 결국 공직자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부패를 저지르는 것이다.

백성은 뒷사람을 섬기는 자이고,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다. 수령 노릇을 잘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므로 백성을 위해 크게 탐하는[大貪]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 (후략).  
- 정약용,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문항 -

크게 탐하는 공직자는 곧 포부가 큰 공직자, 쉽게 말해, 공직자로서의 성공을 꿈꾸는 자를 일컫는다. 그러한 공직자는 부패를 저지르면 그것이 공직자로서 성공하는 데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청렴을 실천하려 한다는 것이 정약용의 생각이다.

⑤ 정약용은 공직자가 재정 지출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

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① 수령은 공무 시행 시 재정 지출의 효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정약용 X)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문항 -

⑤ 국민에게 미치는 실효성을 따져 재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정약용 O)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8번 문항 -

8. 성(性)에 대한 중도주의와 보수주의의 입장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약간 독특한 내용을 쟁점으로 설정해 두었다.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중도주의, 을은 보수주의의 입장에 있다.

[선지 분석] ① 갑과 을 모두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갑과 을 모두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갑과 을 모두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갑은 동의하지 않고 을은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⑤ 갑과 을 모두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9. 노직과 롤스의 분배 정의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기출문제와 원전 내용의 적절한 버무림.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선지 분석] ㉠. 노직에 따르면 교정의 원칙은 누구의 소유 권리도 제한하지 않는다. 아래의 해설은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의 논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출문제를 아직 풀어 보지 않았다면 아래 해설을 읽기 전에 꼭 풀어 보기를 권한다.

S<sub>1</sub>: 갑은 정당한 노동으로 재화 g를 취득했다.

↓

S<sub>2</sub>: 을은 갑에게서 g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

↓

S<sub>3</sub>: 병은 을에게서 g를 강제적으로 빼앗았다.

↓

S<sub>4</sub>: 정은 병에게서 g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

\* 화살표(↓)는 상황(S)의 경로를 나타낸다.

- ① S<sub>1</sub>에서 갑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노직 O)
- ② S<sub>1</sub>이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라면 S<sub>2</sub>도 그렇다. (노직 O)
- ③ S<sub>3</sub>에서 을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노직 O)
- ④ S<sub>4</sub>는 S<sub>3</sub>과 달리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다. (노직 X)
- ⑤ S<sub>4</sub>에서 정은 g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노직 O)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 -

S<sub>1</sub>에서 갑은 정당한 노동으로 재화 g를 취득했으므로, S<sub>1</sub>에서 갑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도 가진다.

S<sub>2</sub>에서 을은 g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던(g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 g를 가지고 있던) 갑으로부터 g를 자유롭게 양도받았으므로, g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g에 대한 소유 권리도 가지게 된다(㉠ 선지 해설 참고).

S<sub>3</sub>에서 병은 을에게서 g를 강제적으로 빼앗았다. 그럼 이제 g는 을이 가지고 있지 않고 병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때, 재화 g는 을에게서 병에게로 옮겨 갔을지언정, 재화 g에 대한 소유 권리까지 을에게서 병에게도 옮겨 간 것은 아니다. 강탈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sub>3</sub>에서도 g에 대한 소유 권리는 여전히 을에게 있다.

S<sub>4</sub>에서 정은 병에게서 g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 그럼 이제 g는 병이 가지고 있지 않고 병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때, 재화 g에 대한 소유 권리는 여전히 을에게 있다. S<sub>4</sub>에서 병에게서 정에게로 g는 자유롭게 이전되었으나, 병이 재화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직의 분배 정의 원칙은 역사적 원리에 따르므로, S<sub>4</sub> 이전에 이미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교정하기 전까지는 꼭 부정의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재화 g	재화 g에 대한 소유 권리
S <sub>1</sub>	갑이 가짐	갑이 가짐
S <sub>2</sub>	을이 가짐	을이 가짐
S <sub>3</sub>	병이 가짐	을이 가짐
S <sub>4</sub>	정이 가짐	을이 가짐

자 그렇다면 이제 '교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재화를 취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과오나 잘못된 절차에 의해 부정의한 소유 상태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정의로운 소유 상태로 바꾸어 놓는 것이 교정이다. 그런데 노직에 따르면 분배 정의란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해 소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이다.

병: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중립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이다.  
- 노직,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번 문항 -

그렇다면 위의 상황을 다음의 표로 재정리할 수 있다.

상황	재화 g	재화 g에 대한 소유 권리	정의/부정의
S <sub>1</sub>	갑이 가짐	갑이 가짐	정의
S <sub>2</sub>	을이 가짐	을이 가짐	정의
S <sub>3</sub>	병이 가짐	을이 가짐	부정의
S <sub>4</sub>	정이 가짐	을이 가짐	부정의

재화 g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재화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경우는 정의롭다. 반면 재화 g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재화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는 부정의하다. 교정이 부정의한 소유 상태를 정의로운 소유 상태로 바꾸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정을 '임의의 어떤 재화 a에 대한 소유 권리 없이 재화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a를 가져와 재화 a에 대한 소유 권리는 있지만 재화 a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S<sub>3</sub>에서 병에게서 g를 가져와 을에게 돌려주거나, S<sub>4</sub>에서 정에게서 g를 가져와 을에게 돌려주는 것이 교정일 것이다. 교정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서 재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여기서의 '어떤 사람'은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서 재화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가 소유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정을 통해 해당 재화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재화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던 사람에게 해당 재화를 돌려줌으로써 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교정의 원칙은 어떤 사람의 소유 권리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윤리와 사상 기출문제에 선지로 출제된 바 있다.

㉡. C: 시정의 원칙에 따른 국가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노직 X)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7번 문항 -

㉢.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특정 정부 형태의 설립을 합의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목적은 이룰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백화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관점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distributive aspects)라 부르고자 한다.  
- 롤스, 「정의론」 -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의 합의하는 것이 특정 정부 형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정의의 원칙이 어떤 정부 형태를 설립해야 할지를 명시해 주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정부 형태를 설립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의 내용에 합의하고, 그것이 추후 어떤 정부**

**형태를 설립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준다는 것이다.**

ㄷ. 롤스에 따르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정의 원칙에 대한 합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연성의 결과들이 무효화되어야 한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 롤스, 『정의론』 -

갑: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며,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가상의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하게 될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 롤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85p 3~4번 문항 -

관련한 깊이 있는 설명은 1회 해설지의 12번 문항 해설에서 이미 했으므로 생략하겠다.

ㄹ. 일단 노직과 롤스 모두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 권리를 지닐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점을 밝혀 두겠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만 해설을 하고, '나는 너희보다 생활과 윤리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 내 설명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말하는 건 이 해설을 읽는 수험생들에 대한 모독이므로, 아래에 상세한 해설을 써 놓았다.

노직은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어떤 재화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받았다면 해당 재화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을: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는 성립할 수 있다. (노직 O)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번 문항 -

노직에 따르면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뿐 아니라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의 원칙 역시 재화에 대한 소유 권리를 성립시키기 때문이다.

③ 노직의 '소유 권리론'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는 취득한 사람에게 그 소유 권리가 있음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의 원칙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받은 재화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음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78p -

그렇다면 롤스는 어떨까? 평가원에서는 이에 대한 롤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7. A: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는가? ([노직은 '예', 롤스는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음)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문항 -

그런데 위에서 우리는 이 질문이 노직이 '예'라고 답할 질문임을 확인했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번 문항). 원리는 간단하다. 롤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합법적 기대치를 할당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선천적인 조건으로 생산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정의의 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합법적 기대치는 할당받아야 한다.

③ 갑, 병: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한다. (롤스 O)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번 문항 -

오히려 롤스는 개인의 노동 정도에만 근거한 분배를 비판한다. 아래의 인용 자료는 그냥 가볍게 읽어 보기만 하면 된다.

나아가서 상식적인 기준들이 갖는 종속적인 지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때때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들이 일상생활에 친숙한 것이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부차적인 지위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조들 중에 어떤 것도 제1원칙에 승격될 수 없다. 아마도 그 각각은 어떤 특정한 제도와 관련된 적절할 국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겨난 듯한데 이러한 국면도 여러 국면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그 제도 또한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들 중의 하나를 제1원칙으로 채택하게 되면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들에 소홀해지는 결과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만일 모든 혹은 여러 신조들이 제1원칙으로 취급되면 체계상의 명료성이 없어진다. 상식적인 신조들은 그릇된 일반성의 수준에 있는 것이다. 적절한 제1원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어떤 신조들은 처음에는 제법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각자에게 그의 기여에 따라서라는 신조는 완전한 경쟁 경제에 있어서 많은 경우의 분배에 적용된다. 분배에 대한 생산성 이론을 받아들여지면 생산의 각 요소들은 (생산 수단에 있어 사유 재산을 인정할 경우) 그것이 산출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가에 따라 소득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결과가 갖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충분한 가치의 지불을 받게 된다. 언뜻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공정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것은 우리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 자연적인 재산권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 호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학자에게는 기여에 의거한 신조가 정의의 원리로서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타당하지 않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은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다. 개인이 그의 노동에 의해 기여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며 나아가서 이것은 다시 그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기여는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사한 재능을 제공하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 롤스, 『정의론』 -

10. 칸트, 싱어, 테일러의 환경 윤리 이론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면서 수능윤리 전문가 행세를 해 대는 사람들에게 생활과 윤리를 잘못 배운 학생들을 위하여, 상세한 해설을 적어 두었다.

**[정답] ①**

**[제시문 분석]** 같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칸트, 음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이 싱어, 명은 생명 중심주의 사상이 테일러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로서 이성적 능력을 결여한 존재, 동물이나 식물 등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싱어와 테일러는 탈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로서 이성적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ㄴ.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에,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반면 싱어는 ‘모든’ 동물이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칸트는 인간이 아닌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

ㄷ. 싱어가 부정할 진술이다. 싱어에 따르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존재들 간에도 생명의 가치는 차등적일 수 있다. 먼저, 싱어의 입장에서 어떤 존재에게 고통을 죽이는 문제와 그 존재를 죽이는 문제가 구별됨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까지 동물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 왔지만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했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고통을 가하는 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매우 직접적인 것이다. 아픔과 고통은 나쁘며, 그것을 겪고 있는 존재의 인종, 성, 종족에 관계없이 방지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고통이 얼마나 나쁘냐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똑같은 강도와 지속성을 가지는 고통은 인간이 느끼든 동물이 느끼든 마찬가지로 나쁜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게 될 때는, 인간의 생명인 생명은 생명이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자기를 알고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복잡한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가진 존재의 생명을 이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족주의는 아닐 것이다.

- 싱어, 『실천윤리학』 -

두 생명체 a와 b가 있다고 해 보자. a는 단지 의식만을 지닌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자의식이 없어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할 수 없는 하등 동물이다. b는 의식을 가져서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의식까지 갖추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고등 동물이다. 비록 a는 하등 동물이고 b는 고등 동물이라 할지라도, a와 b 모두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므로 a에게 10만칸의 고통을 주는 것은 b에게 10만칸의 고통을 주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나쁘다. 이것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그러나 a와 b를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행위가 죽임 당하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존재를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은 괜찮을까? 일반적으로는 그 역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죽이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죽지 않았으면 느낄 수 있었을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만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죽이고 그 존재와 같은 종류의 존재를 다시 태어

나게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경우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죽음으로써 느끼지 못하게 될 쾌락을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느끼게 됨으로써 방금 전에 제기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 ‘죽임을 당한 존재가 느끼는 쾌락이 새로 태어나는 존재의 쾌락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이때 우리는 자의식 등을 지닌 고등 동물과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 하등 동물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a는 자의식이 없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으며, 자신을 시간상의 연속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a를 죽이고 나서 a와 같은 종류의 존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면, a가 느끼지 못하게 된 쾌락은 새로 태어난 존재가 느끼는 쾌락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b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b는 자의식이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며, 자신을 시간상의 연속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b가 가지던 미래에 대한 소망 등은 b 자신에게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존재의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a를 고통 없이 죽이고 a와 같은 종류의 존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b를 고통 없이 죽이고 b와 같은 종류의 존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부당한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싱어의 글로 다시 한번 읽어 보자.

우리의 최선의 지식에 따라 때, 자신에 대한 앎을 결여하고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살생을 반대할 최선의 직접적인 이유가 즐겁고 재미있는 생명의 손실이다. 죽음을 당한 생명이 따져 볼 때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지 않다면, 직접적으로 그릇된 것은 없다. 죽음을 당한 동물이 즐겁게 살 것이었다고 할 때도, 죽음을 당한 동물이, 그러한 죽임의 결과로서, 똑같이 즐거운 삶을 살아갈 다른 동물로 대체된다면, 아무런 나쁜 일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적어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것은 현존하는 존재에게 가해진 그릇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존재에 주어지는 이익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의식만을 지닌 동물들을, 미래감을 갖는 존재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어떤 환경에서는, 동물들이 즐거운 삶을 살고 있고, 고통 없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죽음이 다른 동물에게 고통을 일으키지 않고, 한 동물의 죽음이 그렇지 않았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다른 동물의 삶에 의해 대체된다면, 자기에 대한 앎이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 싱어, 『실천윤리학』 -

싱어의 결론은 이러하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동물들 중에서도 자의식, 미래감 등을 갖는 존재의 생명의 가치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생명의 가치보다 높다.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생명의 가치가 다른 하등 동물들의 생명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들의 가치를 위계적인 서열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연적으로 종족주의는 아닐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를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다양한 종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과 같을까라는 상상적 재구성 정도이다. 어떤 비교는 너무 어려울지도 모른다. 물고기와 배 중 어느 것이 좋을지도 대체 알 수가 없다고 아마 말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물고기와 배 중 어느 것을 죽여야 할지 선택해야만 하는 때는 그리 흔하지 않다. 다른 비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존재의 정신 생활이 높게 발달되면 될수록, 자기에 대한 앎과 합리성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가능한 경험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것과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는 존재 중에 선택하는 경우라면, 높은 종류의 것이

많이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 싱어, 『실천윤리학』 -

ㄷ. 싱어가 부정할 진술이다. 싱어는 채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이 인간과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에 “ㄱ. B: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선지가 나오자, 싱어에 따르면 채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조차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해설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퍼졌었기 때문에, 자세한 해설을 통해 이에 관련한 수험생들의 오해를 바로잡겠다. 마찬가지로, **혹시 자신이 선택한 답사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을 해설하며 이 선지를 잘못 해설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란다.**

싱어가 ‘종(種) 차별주의(specism)’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 들었던 유비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갑: 인종이나 성(性)을 근거로 하여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그른 것처럼, 우리 종(種)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이익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다.

- 싱어,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문항 -

싱어는 인종 차별이나 성 차별이 그릇된 것처럼, 종 차별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종이나 성이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듯이, 종 역시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싱어는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Hence we have to conclude that the standard ethical view that we find expressed in the statement by John Paul II—the view that all human beings, irrespective of their cognitive abilities, have moral status, and that this status is superior to the moral status of the most intelligent nonhuman animals—cannot be defended. We find ourselves in need of an alternative to the status quo.

- 싱어, 「SPECISM AND MORAL STATUS」 -

에당초 싱어가 제시하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싱어의 입장에서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과 인간이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과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곧 양자의 도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주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should apply to both humans and animals. That’s the sense in which I want to elevate animals to the moral status of humans.

- 싱어, 「SPECISM AND MORAL STATUS」 -

아래의 설명은 꽤 중요하다. **과년도 EBS 연계 교재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과년도 EBS 연계 교재의 내용을 다수 차용하여 구성된 강의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에 해설 강의에서 잘못된 설명을 퍼뜨린 강사는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교재에 “①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싱어 X)”라는 선지가 출제되었다는 점(49p)을 근거로 자신의 설명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이러한 정당화 근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당시 해당 강사는 이러한 설명을 2022년 6월에 치러진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에서 하였는데, 그가 근거로 제시한 선지는 2020년에 출시된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평가원에서는 당해 연도 EBS 연계 교재가 아닌, 과거의 EBS 연계 교재의 타당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일례로, 그가 근거로 삼았던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에는 이러한 선지도 출제된 바 있다(133p). “ㄴ. B: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된다. (칸트 O)” 그러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ㄴ. C: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칸트 X)”라는 선지가 출제되었다는 점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싱어 본인이 저술한

학술 문헌 및 평가원 기출문제 제시문의 진술과 충돌하는 내용이 과년도 EBS 연계 교재에 실려 있다면, 과년도 EBS 연계교재에 실린 내용을 버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한 채 수능 윤리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 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ㄷ.과 ㄷ.에 대한 통합적 해설]**

‘아니,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 간의 생명의 가치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ㄷ),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 간의 도덕적 지위는 평등하다고(ㄷ)?’ 하는 의문이 드는 수험생이 있다면 아래의 짧은 설명을 잘 읽어 보도록 하자.

다시 말하지만 **싱어가 볼 때, 채고 감수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와 그 존재를 ‘죽이는 문제’는 서로 구별된다.** 이게 중요하다. 고통을 주는 문제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과 관련되며, 평등한 도덕적 지위와 관련된다. 반면 죽이는 문제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의 평등성과도 관련이 없다.

**11. 맹자와 장자의 입장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무난무난하다.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갑은 유교 사상이 맹자, 을은 도가 사상이 장자이다.

**[선지 분석]** ㄱ.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덕(四德)에 따라 사는 삶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장자 역시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연의 덕에 따르는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ㄴ. 맹자와 장자의 공통된 입장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맹자는 사덕, 즉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발휘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상적 삶이라고 보았다. 장자는 타고난 자연의 덕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다.

-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8p 2번 문항 해설 -

ㄷ. 맹자와 장자 모두 인간이 후천적 수양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맹자와 장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양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ㄹ. 맹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맹자는 선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ㅁ. 맹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맹자는 사회 규범으로서의 예(禮)에 따르는 것이 사회 혼란을 잠재우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12. 롤스와 싱어의 시민 불복종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1회 문항의 연장선에서...

[정답] ②

[제시문 분석]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선지 분석] ㄱ.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며, 시민 불복종은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다.

①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인가? (롤스 O)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번 문항 -

ㄷ.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롤스 O)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항 -

ㄴ. 롤스에 따르면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것은 체제의 안정에 기여한다.

나는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부정의를 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 롤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

ㄸ. 싱어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로서의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하여 깊이 있는 해설을 이미 1회 해설지의 17번 문항 해설에서 했으므로, 아래에는 인용자료만 하나 첨부해 놓겠다.

다수결의 규칙에 대한 옹호론이 과대평가되지는 말아야 한다. 지각 있는 민주주의자라면 어떤 사람도, 다수가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49%의 사람들이 틀릴 수 있다면, 51%의 사람들도 틀릴 수 있다. 다수가 동물해방전선이나 구조작전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항의자들의 견해를 지지하느냐 여부가, 이러한 견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여부를 확정하지는 못한다. ... (중략) ... 그들 편을 드는 다수가 없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적 전통에 전적으로 대항하는 자가 되며, 바로 그들이 억압자, 즉 다수에게 다수의 의사와 반대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얼마만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 싱어, 『실천윤리학』 -

ㄷ. 롤스에 따르면 입법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따르는 것이다. 법의 정의로운 여부를 판단할 독립적 기준은 존재하지만, 법의 정의로운 여부를 완전히 보장할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법의 정의로운 여부를 판단할 독립적 기준은 정의의 원칙일 것이다. 어떤 법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그 법은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법이 정의의 원칙에 만족하게 제정될 것을 완전히 보장하는 정치적 절차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롤스의 생각이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

그러나 정치 과정이란 기껏해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하나인 까닭에 그는 다수에 의한 입법이 어느 때에 준수되어야 하고 어느 때에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거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롤스, 『정의론』 -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

로 말하면 정의로운 헌법이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편성된 정의로운 절차라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헌법에 의해 규제되는 정치적 과정이며 그 결과는 제정된 입법의 체계일 것인데, 정의의 원칙들은 절차나 결과 양자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정해줄 것이다. 이와 같은 순수 절차적 정의의 이념을 추구하는 데 있어(14절) 첫 번째 문제는 정의로운 절차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평등한 시민권의 자유들이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들 자유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동등한 정치적 권리들을 포함한다. 입헌민주주의 constitutional democracy의 어떤 형태라고 생각되는 정치 체제가 이러한 자유들을 구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절차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어떤 실제의 정치 과정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실상 정의롭지 못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절차상의 정치적 규칙의 체계란 없는 것이다. 입헌 체제나 혹은 어떤 정치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도 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다. 달성될 수 있는 최선의 체제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계일 뿐이다. - 롤스, 『정의론』 -

그러므로 롤스는 현실의 정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도 부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롤스에 따르면 현실의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할 경우, 그것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싱어는 현대 민주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하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법도 실제로는 다수 유권자의 의사를 진정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대표자들이 다수의 선거구민과 같은 견해를 가질 것임을 보장할 방법은 없다. 텔레비전에서 케나렌리의 비디오테이프\*에서 발췌한 부분을 본 미국인들 다수는 그 실험을 지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의 체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다. 대표자들을 선택할 때, 혹은 정당을 선택할 때, 선거인들은 제시되어 있는 저 '꾸러미'의 정책이 아니라 이 꾸러미의 정책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정책에 찬성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자들은 그들이 열망하지 않는 다른 정책에도 찬성해야만 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다. 투표자가 좋아하는 정책이 어떠한 주요 정당에 의해서도 제안되지 않는 일도 또한 생기게 된다.

- 싱어, 『실천윤리학』 - \* 끔찍한 동물 실험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인용자 주]

싱어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 민주적 절차로 제정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관련된 깊이 있는 설명은 1회 해설지의 17번 문항 해설에서 이미 한 바 있다.

13. 지멜의 유행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무난한 독해 문항이지만, 지멜에 대한 개념도 알개는 알아 두면 좋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정답] ②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지멜이다.

[선지 분석] ①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삶의 형식들 중 일부이며,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기여한다.

②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계속 변화한다. 제시문에서도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동화되는 순간 소멸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준다.”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타인을 모방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④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행해진다.

⑤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개인의 차별화 욕구, 즉 개성 표현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

14. 과학 기술과 자연 환경에 관련한 글의 입장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쉬운 독해 문항이다.

[정답] ⑤

[제시문 분석] 제시문에 따르면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자연 개발로 자연 파괴의 문제가 일어나 인간에게까지 해악이 초래되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선지 분석] ① 제시문에서는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을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② 제시문에서는 인간의 경제적 풍요보다 자연의 보존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③ 제시문에서는 자연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편의 증진이라고 보지 않는다.

④ 제시문에서는 자연 파괴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⑤ 제시문에서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15. 베카리아, 칸트, 벤담의 형벌 이론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베카리아의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 묻는 선지가 있다.

[정답] ②

[제시문 분석] 같은 베카리아, 음은 칸트, 병은 벤담이다.

[선지 분석] ① 베카리아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는 재판관에게 형벌 법규를 적용할 권한을 있으나 그것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베카리아에 따르면 재판관이 공공 복리를 열망한답시고 범죄자에게 법정형 초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본서는 근대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위한 선언서이기도 하다. 오늘날 국민의 수준으로 인정된 수많은 명제들이 이 책에서 유래하고 있다. 즉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 재판관이 법률의 한도를 넘어선 형벌을 과할 경우 그 재판은 부정적이다! 법관은 형벌법규를 적용할 권한은 있어도 그것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법의 정신에 따른 해석은 법관을 입법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 한인섭, 『범죄와 형벌』 역자의 말 -

첫째,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권한은 사회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속한다. 사회의 일원에 지나지 않는 어떤 재판관도 같은 사회의 다른 성원에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떤 형벌도 과할 수 없다. 재판관이 법률에 규정된 한도를 넘어선 형벌을 과할 경우 그 형벌은 부정적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벌은 미리 정해진 정당한 형벌보다 새로운 형벌을 덧붙여 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재판관도 공공복리를 열망하거나 공공복리를 우려한답시고 범죄를 저지른 시민들에 대해 법률로 이미 정해진 형벌보다 더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② 칸트는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 집행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애당초 범죄자가 형벌에 동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깊이 있는 설명은 1회 해설지의 15번 문항 해설에서 이미 한 바 있다.

병: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 칸트,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

반면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 집행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사형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④ D: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

③ 벤담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벤담은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와 일반 시민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형벌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범법자의 행동이거나 범법자가 아닌 사람의 행동이다. 형벌은 범법자의 의지에 영향력을 미쳐 그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교정(reformation)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혹은 범법자의 육체적 힘에 영향력을 미쳐 그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무력화(disablement)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범법자가 아닌 사람의 행동과 관련하여, 형벌은 다름 아닌 그들의 의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본보기(example)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

④ 벤담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벤담은 사회 계약 이론을 비판하며, 국가가 가지는 형벌권의 근거가 그러한 가상적 계약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라는 용어는 Jeremy Bentham에 의하여 체계화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벤담은 사회 사상적 측면에서 자연권 이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흄이나 버크와 동일한 입장이었다. 그는 자유주의자로서 사회 계약론자들의 이론적 근거인 자연 상태, 사회계약, 자연적 인간관리에 대한 흄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 김용남, 「현대사회의 윤리문제에 있어서 고전적 공리주의의 한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

ㄱ. A: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벤담 X)  
-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문항 -

⑤ 베카리아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 역시 벤담과 마찬가지로 형벌이 최대 행복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갑, 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베카리아 O)

-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

16. 동화주의와 셸러드 볼 이론의 다문화 이론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셸러드 볼 이론도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고!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가)는 동화주의, (나)는 셸러드 볼 이론이다.

[선지 분석] X: 셸러드 볼 이론은 동화주의와 달리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므로, (나)는 (가)에 비해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정도’가 높다.

Y: 동화주의는 셸러드 볼 이론과 달리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 통합을 강조하므로, (나)는 (가)에 비해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정도’가 낮다.

Z: 셸러드 볼 이론은 동화주의와 달리 사회 통합을 위한 소수 문화의 정체성 보존을 강조하므로, (나)는 (가)에 비해 ‘사회 통합을 위한 소수 문화의 정체성 보존을 강조하는 정도’가 높다. 셸러드 볼 이론에서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는 수험생이 있다면 다음의 기출문제 선지를 살펴봐야 한다.

ㄷ. (가), (나)는 다양한 문화를 전제로 한 사회 통합을 중시한다. (국수 대접 이론 O, 셸러드 볼 이론 O)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번 문항 -

셸러드 볼 이론이나 국수 대접 이론, 동화주의 모두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같다. 세 입장 모두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다만 사회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 적절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 입장 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17. 모겐소의 현실주의적 국제 평화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평가원 기출문제와 지난해 EBS 수능완성을 반영한 문항.

[정답] ③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현실주의 사상가 모겐소의 입장이다.

[선지 분석] ㄱ. 모겐소는 국가들 간에 평화 유지를 위한 평화 조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칸트와 모겐소 모두 평화를 위한 국가 간 평화 조약은 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칸트는 장래의 전쟁 소재를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체결된 어떠한 조약도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2023학년도 EBS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1p 1번 문항 해설 -

ㄴ. 모겐소에 따르면 국가들 간 동맹 조약 체결이 없어도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

ㄴ. 갑: 국가 간 동맹 없이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은 불가능하다. (모겐소 X)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번 문항 -

ㄷ. 모겐소에 따르면 세력 균형으로 국가들 간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들 간의 이익 충돌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③ 을: 국가들 간에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모겐소 O)

- 2023학년도 EBS 수능완성 107p 1번 문항 -

ㄹ. 모겐소는 국가의 행동이 가지는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ㄱ. 갑: 경쟁 국가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모겐소 O)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번 문항 -

18. 현대 사회의 감시 문제 이해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칼럼을 정독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정답] ④

[제시문 분석] 칼럼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쌍방향적 감시가 여러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선지 분석] ① 칼럼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행해지는 감시는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등의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

② 칼럼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감시에서는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③ 칼럼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칼럼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행해지는 감시를 통해 사회의 투명성이 증진될 수 있다.

⑤ 칼럼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자와 시민 간의 쌍방향적 감시가 행해진다.

19. 싱어, 베이츠, 롤스의 해의 원조 이론 비교하기

[출제자의 코멘트] 베이츠를 등장시켜 보았다! 과연 올해 평가원 시험에는 롤스, 싱어, 노직 외 제3의 사상가가 등장할 것인가?

[정답] ㉓

[제시문 분석] 같은 싱어, 음은 베이츠, 병은 롤스이다. 베이츠는 롤스와 달리 롤스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을 국제 관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지 분석] ㄱ. 싱어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싱어는 국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국가 내의 개인들의 고통 감소라는 원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ㄴ. 베이츠는 원조의 목적이 국가 간에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국내 사회에서 무지의 장막 속의 사회 구성원이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성과 이로 인한 혜택의 불균등한 배분이 공정하지 못함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국제적 차원에서 무지의 장막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연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자연 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큰 혜택을 누리는 데 반해,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현재의 상황 역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 분배 정의가 실현되려면 자연 자원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현재보다 현격하게 높은 수준의 대외 원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국제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베이츠, 2024학년 EBS 수능특강 181p 3번 문항 -

반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관계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베이츠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ㄷ 선지 해설의 인용 자료 참고) ㄷ. 베이츠는 국제적 차원의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관계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베이츠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ㄱ. 국제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 (베이츠 O)

- 2024학년 EBS 수능특강 181p 3번 문항 -

그러지만 이러한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한 혹은 최선의 방법이 사회들 간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는 추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분배정의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cut-off point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명확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넘어서게 되면 원조가 중단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이다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 롤스, 『만민법』 -

고통받는 사회에 관련해서 핵심은 이상적 만민이 지는 도덕적 의무로서 '원조의 의무'이다. 이 원조의 의무는 불평등한 자원의 분배에서 일어나는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분배정의의 의무'가 아니다. 사회 간의 자원이 차이가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하는 근본적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 장동진·김만권·김기호, 『만민법』 옮긴이 해제 -

ㄴ. 롤스는 원조 대상국인 고통받는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지만,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롤스가 원조 대상국인 고통받는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강

제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① 갑: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국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 원조해야 한다. (롤스 O)

-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 -

ㄴ. 갑: 원조하는 나라는 원조받는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롤스 X)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번 문항 -

20.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론 이해하기

- 하버마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13번 문항 -

[출제자의 코멘트] ④ 선지를 좀 유심히 보고 지나가자.

[정답] 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선지 분석] ①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들은 서로 평등한 지위에서 타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과정에서 담론 참여자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발화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③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의 결과가 반영된 규범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허용해야 한다.

④ 합의에 이른 주장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버마스 X)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

③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에 대해 다시 토론해서는 안 된다. (하버마스 X)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항 -

④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먼저 다음의 제시문을 한번 읽어 보자.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행위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서로 대화를 통해 규범의 도덕적 타당성을 결정할 때는 다음의 윤리적 전제를 필요로 한다. 첫째, 갈등은 폭력에 의해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관련 당사자나 그들의 대변인 간의 공동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합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합의 참여자들은 초주관성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하버마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167p 4번 문항 -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상적 담론의 결과로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게 된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 하버마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번 문항 -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내 이익을 끝까지 관철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담론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담론 참여자는 담론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주장, 선호, 이익이 담론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담론에 참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우길 생각으로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주장에는 수긍할 마음을 가지고 담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 민주주의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에서 서로의 입장과 정책을 토의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 자유롭게 평등해야 하고, 숙고와 심의를 통해 각자의 선호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하버마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7번 문항 -

⑤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과정에서는 행위 능력과 언어 능력을 모두 갖춘 당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을: 일체의 외적 강제력이 배제되고, 상호간 비판에 열려 있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모든 당사자는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출제 및 해설]

유삼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해움 수능윤리 연구소 카카오톡: ysh04129 / 김과와: 유삼환  
김관우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연구소 인스타그램: @kingwanu.3d  
김민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연구소  
이지인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연구소 메가스터디 큐브: 이지인 마스터

\* 확인 사항  
○ 해설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했는지 꼼꼼히 확인  
하십시오.